

“전북 농식품 수출 증가세 유지 위해

품목 다양화 · 신시장 개척 전략 수립을”

국주영은 도의원, “도 신선 농산물 수출 전년비 23.6% 감소, 관련 정책 5년 내내 같은 사업에 동일 예산 지원”

전북도 농식품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도정질문에서 “전북도 농식품 수출이 전년대비 5.2% 증가한 4억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실제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특정 국가에 수출이 편중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농식품 수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주 의원은 2020년 전북도 농수산식품의 품목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했는데, 전북도는 오히려 23.6%나 감소했고, 전체 점



유율도 6.1%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4~6개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면서 똑같은 예

상을 지원해왔고, 신규사업은 2020년 ‘코로나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이 유일하다”고 전북도 농식품 수출 관련 예산 증액은 물론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농식품 수출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농식품 수출 전문가,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농수산식품 세계화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계와 협정의 다양한 수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농수산식품 수출촉진협의회도 없다”고 지적하며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학계, 현장 전문가로 이뤄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북도 농식품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관련 예산 증액은 물론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농식품 수출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농식품 수출 전문가,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농수산식품 세계화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12일 ‘전주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찾은 팔복동 소재 (주)대경신전을 찾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및 경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주경제 심장 팔복동 구석 구석

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 중소기업·주민과 소통 이어가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 경제의 심장인 ‘팔복동’ 일대를 구석 구석 누비며 중소·중견기업·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잘 나가는 전주, 속 시원하게 일하는 경제시장’이 되고자 제시한 주요 공약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행보를 본격화 한 것이다.

12일 조 전 원장은 전주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팔복동 소재 (주)대경신전(대표 김대호)

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및 경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대경신전은 지난 2001년 문을 연 뒤 수배전반, 에너지저장장치(ESS), 빛담은 접속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김대호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다”며 “무엇보다 인력난이 나날이 가중,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민족이며 대안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대학과 기업이 맺는 계약화과 같은 방법을 확장해 지역 인재를 확보하는 등 청년들이 전주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소통을 이어갔으며, 팔복 예술공장에서는 주민들과 만나 팔복

동 환경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 전 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1차로 전주첨단밸리단지 내 (주)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 전북여성벤처기업협회, 전북첨단기업협의회, 전주금속기공소공인협의회, 소공인융합협동조합, (사)글로벌 청년수출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전주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조 전 원장의 경제 핵심 공약인 ‘팔·만·여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탄소신사업진흥원에서도 온정성 탄소산업진흥원 입주자 대표협의회장, 민형선, 하이하우징 대표, 탄소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최하는 한편, 예약장을 통장협의회장, 주민들을 만난 뒤 ‘16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팔복동 일대에 부족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조 전 원장은 1·2차례 걸쳐 누빈 팔복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주 곳곳을 땀으로 적시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전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시장 최우선에 놓겠다고 선언한 민족·팔복동·에서부터 전주 누비기를 시작했다”며 “1·2차례 걸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은 물론 전주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경제 공약에 잘 녹여내 전주경제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 곳곳을 땀으로 적시며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잘 나가는 전주를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환(왼쪽부터) 전북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김은희 대구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록하고 있다.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 쟁점… 국회 교육위 국감

“명백한 인재·철저한 재발방지책 수립” 촉구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합시다. 애도의 마음은 담은 묵념과 함께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트에 불은 때까미 제거 짐수작업 중 숨진 여수 한 특성화고 홍정운 군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장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원회들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점검을 질타하며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교育위 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조재진 교육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장으로서 책

대한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입직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단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계와 산업체의 진실 어린 반성과 협력적 대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 있었던 이이는 규정을 어겨며 육십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과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소모품이 아니다.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나 죽음이 쇄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국내 디자인산업, 상품경쟁력 강화 핵심”

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디자인센터 등 찾아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2일 익산시 소재 전북디자인센터와 에코융합섬유 연구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의 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8년 4월에 개소한 ‘전북디자인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내 특화센터로, 전북도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들의 디자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 현황을 청취한 김철수 위원장(정의당)은 “국내 디자인산업은 기업의 제품기획, 개발, 유통 등 전주기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잠재적인 디자인 수요를 발굴하고, 도내 기업

임을 느낀다”며 “푸른 꿈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 일이 없도록 미음을 더하는 의미에서 국감 시작 전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목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흥군을 주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 있었던 이이는 규정을 어겨며 육십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인재다.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건립 중인 전지훈련센터 추진토록 노력”

도의회 문건위, 도 국제양궁장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2일 전북도 국제양궁장을 찾아 조성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회들은 먼저 주경기장을 찾아 전북도 국제양궁장 조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금메달 획득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전북선수단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문건위원회들은 보조경 기장, 연습경기장, 실내훈련장 등 국제양궁장 내부 시설을 점검하며, 양궁장을 이용하는 선수 및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문건위원회들은 보조경 기장, 연습경기장, 실내훈련장 등 국제양궁장 내부 시설을 점검하며, 양궁장을 이용하는 선수 및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양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건립예정인 전지훈련센터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국제양궁장은 지난 2013년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임실군 오수면에 98억 원을 들여 부지조성(7만3,683㎡), 주경기장(2만9,400㎡), 보조경기장(5,000㎡) 경기운영시설(2,674㎡) 등을 조성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제양궁장이

호남고속철도 지반침하 심각

46회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발주처 태도 미온적



코레일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 까지 호남고속철도 토공부 노반 침하 관련 46회의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고속 철도 건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위 김윤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12일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지적했던 호남고속철도의 토공부 약 55km의 22.4%에서 허용침하량 30mm를 훌쩍 넘은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상황을 질의했다.

그리면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하자보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즉시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국토부 철도국은 이를 철저히 감독,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윤의 의원은 “국정감사가 1년이 지난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10개월이 넘었는데 2km 밖에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근본적인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이처럼 하자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호남고속철도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회사에 벌점 부과를 하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자보수이행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부과를 못했다”면서 “호남고속철도의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에도 지난 2018년 강릉선 탈선사고처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면, 결국은 사고를 당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가철도공단에서 보수를 완료했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허용 침하량을 넘겨 보수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국토부 철도국에서 호남고속선 하자보수와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필요하다면 국가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집행해 시민이 미흡하게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